



국제노동기구 소식

국제노동기구 지침서: 코로나19가 여성과 남성 의류업 종사자에 미친 영향

202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코로나19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의류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분석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에 제시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영향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단기적 영향>

생활필수품 부족: 많은 의류공장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일시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은 식품,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필수품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인구의 71퍼센트는 포괄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두 명 중 한 명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이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사회보장방안이나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빈곤과 굶주림을 겪게 된다.

성차별적 고용기준: 일부 의류공장에서 인력 감축결정을 내리면서 특정성에 편중된 선발기준을 가지고 여성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감축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인 기준은 계약조건, 근무연수, 성과, 자격, 결근 기록 등이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여성이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차별적 관행을 지속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수당 지급을 연기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통지시 실제 업무능력이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특정 여성 집단이 집중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기적 영향>

사회적 담화 부족으로 인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 사회적 담화의 부족으로 차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 성별을 포용하는 사회적 담화와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정책대응 수립을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과거 2008-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담화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신속한 회복대응을 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 의사결정 단체의 대표성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의류산업의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공장경영단체 등에서 여성 대표의 비중이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위원회나 의사결정 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의류업의 기존의 성별 격차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장기적 영향>

일자리 수 감소 및 일자리의 질 악화: 의류업은 통합, 기술의 업그레이드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수와 그 질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류업은 여성 노동자에게 공식부문의 유급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비공식적 근무형태로 일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의 75퍼센트, 남아시아 국가의 89퍼센트,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국가의 90퍼센트 이상에서 여성 비공식 근로자의 수가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특히 우려스럽다.

지침서는 의류업의 강력한 회복을 위해서 포용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응하고, 젠더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노력, 여성의 목소리, 대표성, 리더십을 담화 및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ttps://www.ilo.org/asia/publications/WCMS_760374/lang-en/index.htm

유네스코 소식

환경교육을 통한 아동의 권리 실현

유엔인권이사회는 제45차 회기(2020년 9월 14일-10월 7일)에 “아동의 권리: 건강한 환경을 통한 아동의 권리 실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매해 150만 명의 5세 이하 아동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아동들은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질병, 장애, 조기사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도 아동들이다.

이번 결의안은 각국이 환경오염 상황에서 아동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는 국내법과 정책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환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의안은 기후변화와 그 밖의 환경문제를 모든 단계의 교육에 포함시켜서 아동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미래에 환경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아동의 교육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1)조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도하는 유엔기구로서 아동권리에 환경교육요소를 명시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네스코는 기후변화 위기를 예방하고 17개의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교육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개인이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체계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2021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공식 발표되는 “글로벌 2030 지속가능발전교육계획(global ESD for 2030 framework)의 목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en.unesco.org/news/realizing-rights-child-through-environmental-education>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아르헨티나의 폭력적인 코로나19 예방 수칙 시행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감염병 대응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3월말 봉쇄령을 전국에 발령했다. 사람들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회사와 학교를 폐쇄했으며, 이동을 제한했다. 경찰에 시행권한이 주어지면서 행인들을 무작위로 심문할 수 있게 되었다. 11월 6일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령이 해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언론과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수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월말부터 8월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부인권담당기구가 접수한 경찰폭력사건은 531건에 이르고 이 중 사망사건이 25건이었다.

코로나19감염병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비례적인 봉쇄령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공중보건 대책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한 감독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처럼 저소득계층 거주지역에서 경찰의 폭력이 자주 보고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인권담당기구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동생과 퇴근하던 길에 봉쇄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거주지역에서 경찰이 길가에 서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폭행하고 실탄을 발사하여 7살 여아가 총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코로나19 봉쇄령 실시를 구실로 성소수자에 대해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실에서 4월 봉쇄령 시행지침을 발간했다. 지침은 기존의 아르헨티나 법이나 국제법에 명시된 것처럼 가해진 위협에 비례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발표되었음에도 폭력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국제적 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방경찰, 주경찰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든 단계의 정부기관은 인권침해는 용인되지 않고 과도한 경찰진압은 공정하게 조사되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것임을 명백하게 알려야 한다.

<https://www.hrw.org/news/2020/11/20/argentinas-violent-enforcement-covid-19-rules>

한국 인권위 소식

인권위,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실시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7일 2020년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위원회 부근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명동 2점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인권위가 주최하고 유엔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주유엔 아르헨티나 대표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의 하반기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선 코로나19로 연기된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의 준비 현황 및 정부 간 논의상황을 점검한다. 이어서 교육, 연수, 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 관련 규범적 요소를 살펴본다. 사회보장, 사회안전(사회보장 최저선 등) 관련 규범요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인의 안전권 보장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의 주제인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 ‘사법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에 리오 하다(Rio Hada)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회권 팀장, 도로시아 슈미츠-클라우(Dorothea Schmidt-Klau) 국제노동기구의 고용정책과 팀장이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디아 말러(Claudia Mahler) 유엔노인인권독립전문가와 키란 라베루(Kiran Rabheru) 세계노인인권연합(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의장이 기조발제자로 회의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할 예정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 필리핀과 폴란드의 국가인권기구, 세계노인인권연합, 헬프페이지 인터내셔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착한 사마리아인 사회서비스단체 등이 발제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에서 중계되는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연구자, 활동가 등 1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